

강제로 묘 옮기라면서…광주시, 이장 비용·대책 ‘나몰라라’

분묘 876기 양산동 천주교공원묘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포함 수백만원 달하는 이장 비용 후지급에 보상 절차마저 까다로워 시, 토지보상 위탁 감정평가원에 책임 떠넘기기…유족들 분통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중외근린공원 일대 양산동 천주교 공원묘지 이장 문제로 유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이장을 해야하는데도, 지원은커녕 위탁업체에 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중외공원을 비롯, 광주지역 9개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중외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된 복구 양산동 천주교공원묘지 내 무덤(876기)을 이장(移葬)키로 하고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주시가 중외공원(시설43만 8308.39㎡·복지149만 8992.61㎡)을 개발, 공동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키로 하는 개발계획을 확정해 해당 부지 내 있는 공원묘지 이장이 불가피해졌다.

천주교 광주교구는 지난 1962년 북동성당 신자

의 특별헌금으로 양산동 부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했고, 현재 1만 6383㎡(4957평·3개의 단지) 부지에 876기의 분묘가 들어선 상태다. 천주교 광주교구 측은 지난 1999년 양산동 묘지가 가득 차면서 매장을 중단하고, 담양군 광암리 일대 부지(21만8078㎡)에 2층 규모의 납골시설(연면적 1057.5㎡)을 조성했다.

해당 묘지를 소유한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무심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에 따라 강제 이장을 시켜놓고도, 유족들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행정적 지원 방안을 알려주는 것조차 인색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장, 유족들은 광주시의 강제 이장 결정으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수백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관련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원에 위탁했으니 감정원이 할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감정원은 관련법 만을 내세워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수십년 전부터 개별적으로 공원묘지 분양을 받았지만 광주시 공원개발사업으로 원하지 않는 이장을 해야하는데다, 비슷한 천주교 납골당을 선택할 경우 기간도 15~30년으로 정해져 있어 재차 이장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유족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감정원은 코로나 등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데도 광주시의 중재나 조정·건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불만이다. 보상을 받는데도 개장신고 필증, 화장증명서, 분묘연구자 보증인 2명의 확인서, 개장사진 등 갖춰야 할 자료가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유족들은 “광주시는 지난 1월만해도 사업에 협조하면 이장 비용(불안당 사용료, 화장 비용, 유골함 구입비용 등)을 지급하고 묘주의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안내문을 보내더니 이제와서는 위탁업체가 할 일이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도 유족측 주장대로 “토지보상과 관련 모든 절차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진행중”이라며 “선지급 문제에 관한 민원들이 들어왔지만 한국감정원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내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내 천주교 공원묘지가 이장이 끝나거나 이장을 준비중인 묘들로 어지러져 있다.

놓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지급으로 진행되면 허위로 보상금을 타거나 보상금을 지급받고

이장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서 고교 교사 코로나 확진…수능 앞두고 ‘비상’

수업 들은 3학년 일부 자가격리 학생·교직원 등 573명 검사

수능을 3주 가장 앞둔 상황에서 광양의 한 고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 등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전남 198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인인 전남 197

번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됐다.

A씨는 광양의 한 고교 교사로,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502명의 학생과 71명의 교직원 등 총 573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이 학교의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2주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3학년 학생들은 정상 수업이 진행된다. 다만, A씨가 고교 3학년 수업도 맡고 있어 A씨와 밀접한 3학년 일부 학생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한다.

한편 A씨는 확진 되기전 16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순천의 피트니스클럽을 방문했고, 스포츠시설과 식당, 자동차 수리점 등 동선이 다양해 n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피트니스클럽을 제외한 일부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의

고발과 구상권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3학년 학생의 경우 20여 명이 A씨의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A씨와 밀접 접촉한 학생 등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수능이나 수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기 만선 탓에…

흑산도 해상 어선 전복 1명 사망

조기잡이 어선이 침몰,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힌 물고기 무게에 못이겨 전복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10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흑산도 북서쪽 31km 해상에서 영광선적 35 t 급 채낚기어선 A호가 조업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B(59) 씨 등 선원 10명이 바다에 빠졌다. 선원 9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나 실종된 선장 B(59)씨는 10일 오후 3시 10분께 선박 갑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기잡이를 위해 출항한 A호가 바다에 던져놓은 1.8km 길이 어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들어올려진 어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흑산도 일대 머무르는 조기때를 덕분에 A호는 출항 이후 많은 물고기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다시 그물 가득잡힌 조기를 양망기로 끌어올리다 배가 기울었고 부라부라 선원들이 그물을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뒤집히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게 경찰이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만선(滿船)에 가까운 풍어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안전운전 하세요” 10일 광주시 북구 운암사거리 교차로에서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북구청 직원과 대자동운 초등학교 학부모, 북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강제 추행 혐의’ 전 광산경찰서장 검찰 송치

고위직 경찰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광주일보 9월 3일 6면)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송치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전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광산서장은 지난 8월 21일 지인들과 함께 왔을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 광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물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착수 당시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 사업가 등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20만원가량인 음식값을 사업가인 동석자가 지불했지만 청탁이나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타락 스님’

절에서 23년동안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징역 6년

절에서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중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 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B씨를 2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차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 B씨는 수사 당시 “마음이 아팠다. 스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적능력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세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 범행장소·일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면담자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자율적 진술 등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23년 동안 보호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청구에 대해서는 A씨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저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해당하는 점 등을 반영해 기각했다.

/김자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여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7758	1	나주시 북망로길40, 102동 13층 1308호 [대호동, 현대아파트] 59,400㎡		80,000,000 80,000,000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4810	1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720-1 304㎡ [공유자공선호지분1/4전부]	전	11,304,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토지위에매각제외타인이익제한유실수 [사과나무] 있음
		동소 720-3 211㎡ [공유자공선호지분1/4전부]	전		
2020타경 68159	1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385 436㎡ [매각제외타인소유건물(불특조소세특지분등분주택역45㎡, 컨테이너저장장고, 컨테이너창고, 배가림시설등) 존재]	대	53,192,000 53,192,000	대지만매각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 중기]					
2020타경 70787	1	사용본거지:군산시 옥서면 외성산1길 38 옥봉리 [옥봉리] 등록번호:30누6926 차형:Explorer 2.3 AWD 연식:2018	자동차	36,700,000 36,700,000	보관장소:남구송암로124-3 [송암주차장]
[기타]					
2020타경 67880	1	남구 양과동 1045 1395㎡ [공유자박영현지분1/4전부, 분묘6기소해하고경계구분불명화여측량등발도확인요]	묘지	32,085,000 32,085,00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경매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동지법인 농지특약지각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특약지각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 매각은 매수신청보통공고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약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2. 매각기일: 2020. 11. 25.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0. 12. 2. [수]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 ① 입찰방법에 비한 기일입찰제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등 등록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물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자를 제정한 보증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에게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기대수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④ 최고기대수신인과 차순위매수인들 간에 제1인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당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자 확정일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권을 상실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통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제와 지상권등기를 납부한 후 등본제영수증확인서 및 등본제영수증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주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즉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 ① 매각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다른 법인·단체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권익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법인이나, 사업·자영업자등에 대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열람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인사장(신청)고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방법에 나열된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권이전·매도, 농지특약지각증명 요건은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특약지각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특약지각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⑥ 공고된 물건에는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신청한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추첨서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평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편발행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내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변환공고 → 법원경매정보검색]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사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 없고, 대법원확신청이나 승계해상청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판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